

물놀이 사망 8월초 최다... '이안류' 주의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을 맞아 물놀이객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안류(역파도) 예보 시에는 물놀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8월 초순 물놀이 사고 사망 인원이 46명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8월 중순(32명), 7월 하순(27

5년간 6~8월 물놀이하다 158명 목숨 잃어
50대 이상 '최다'...하천·강·계곡 특히 위험

명), 7월 중순(18명), 7월 초순(9명), 6월 하순·8월 하순(각 8명), 6월 초순(6명)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53명)이 전체의 3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대(31명), 10대(29명), 40대(21명), 30대(14명), 10세 미만(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망 장소는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15.8%·25명)과 유원지(0.6%·1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덜 갖춰진 하천·강(42.4%·67명)과 계곡(20.9%·33명), 갯벌·해변(20.3%·32명)에서 더 많

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28.5%·45명)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금지구역 출입 등 안전 부주의'(27.2%·43명), '음주 수영'(17.1%·27명), '급류'(11.4%·18명), '류브 전복'(8.9%·1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주 수영의 경우 음주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유속이 빠른 위험·금지 구역에는 절

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호우나 이안류 특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즉각 물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물놀이 전에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팔→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소리쳐 주변에 알리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튜브·스티로폼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희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마다 물놀이 사고로 32명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보성군 공무원들이 지난 26일 득량면 도촌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돈사 건축허가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돈사 허가 놓고 '불통 행정' 주민 신뢰 잃은 보성군

주민 삶과 직결된 소송 개시·항소 포기 미통보에 반발

"불통행정이 보성군이 지향하는 '열린행정, 한 발 빠른 행정'입니까"

보성 지역 한 마을 주민들이 군청의 돈사(돼지농장) 건축허가 과정을 놓고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삶과 직결된 돈사 건축허가 문제에 대한 소송 개시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가 하면 1심에서 패소하자 통보나 설명도 없이 조용히 항소마저 포기하는 등 보성군이 주민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주장이다.

27일 보성군 득량면 도촌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의지인인 A씨가 2018년 3월 마을 뒷쪽 한 부지에 돈사 등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성군에 접수했다.

보성군은 일종의 지침서 격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설서를 토대로 이를 허가하려 했다.

이 과정에 도촌마을 한 주민이 축산법 시행령(개정 전)을 근거로 들며 돈사 건축허가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성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주민은 직접 정부 부처를 찾아가 관련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관련 정부 부처는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결국 보성군은 2019년 12월 돈사 건축허가 처분을 거부했다. 그러자 허가 신청인인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한 주민들은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

최근 이 마을 이장은 보성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소송에서 패소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성군이 패소했다는 것이다. 사정을 파악해보니 이미 항소도 포기한 상태였다.

지난 4월 법원은 최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다른 지역이 유사한 사례에도 허가를 해 준 점, 행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보성군이 A씨에게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를 놓고 마을 주민들은 보성군이 소송 개시와 진행 상황, 항소 포기 사실을 제 때 알려주지 않았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 B씨는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민들에게 소송개시 때부터 이를 알려야 했다. 소송이 진행중인 줄 알았다면 재판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했을 것"이라며 "보성군이 기치로 내 건 '열린행정, 빠른 행정'이 이 같은 불통행정이나"고 성토했다.

이어 "마을 인근에 세계 최대 구들장 터가 있는 오봉산이 위치해 있다. 보성군은 이를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농업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도 있다"며 "청정마을 뒷쪽에 6611㎡ 규모의 돈사가 들어선다고 한다. 주민들로서는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C씨는 "마을 주민들이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성군이 사실상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보성=김택순기자

별집 제거 출동률 29% ↑

광주소방본부, 별집소 8~9월 집중

"별집을 보거나 쓰였을 땐 119에 신고하세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폭염일수 증가로 말벌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별집소 사고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별집 제거 출동은 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고,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벌에 쏘이면 통증과 부종, 가려움증 등 피부에 한정하는 국소반응을 일으키지만 일부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혈압이 떨어지고 목이 붓는 등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응급 조치가 없으면 쇼크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별집 발견 시 119에 별집 제거 요청신고를 해야 하고, 야외 활동 중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을 통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7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쇼크로 인한 호흡정지 증상으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올해 5월에는 북구 장등동에서 60대 여성이 집에 남아 든 벌에 쏘인 뒤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도시철도, 출퇴근 시간대 부정승차 집중 단속

다음달 6일까지 전 역사에서 캠페인 병행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 동안 광주도시철도 전역에서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들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비상계약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승차권없이 승·하차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운임이나 부가금을 납부한 여객이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슬비기자

경찰 행세하며 청소년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8년

채팅 앱 만남 10대 여성 2명 성폭행·불법 촬영한 혐의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